

"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,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"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수 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관련 회의 참석 요청

1.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하도급법」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본회와 협동조합이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코자 하오니,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요청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일 시 : '20. 5. 19(화) 12:00

나. 장 소 : 공정거래위원회(세종시)

* 12시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동 예정

다. 참석대상 : 납품대금 관련 협동조합 담당 임직원

라. 회의내용

- 조합원의 하도급 거래 현황 및 하도급대금 관련 애로사항
-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현황 * 불임 참조
-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
-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방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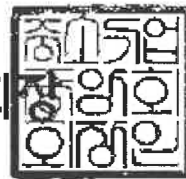
마. 요청사항 : 참석가능여부 회신

바. 회신기한 : '20. 5. 15(금) 12:00까지

사. 문의 및 회신처 :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(☎02-2124-3131)

불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현황 1부, 끝.

중소기업중앙회



수신자 전국(회원전체), 지방연합(회원전체), 지방비연합(회원전체), 사업연합(회원전체), 사업비연합(회원전체)

과장 **여종건** 부장 **전재 05/13**
김희중

수신담당

예산통제

협조자

시행 상생협력부-259 (2020.05.13)

접수

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/ www.kbiz.or.kr

전화 02-2124-3131 전송 02-780-2448 / stranger13@kbiz.or.kr / 부분공개 (9)

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현황

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

□ 제도개요

-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로 법제화
 - 「하도급법」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 ('18.7.17)
 - 「상생협력법」 개정으로 수위탁거래시에도 납품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('19.7.16)

□ 조정신청 사유

- (기존) 원재료 가격 변동 → (개선) 공급원가 변동(원재료비, 노무비, 기타경비)
 - * 기타경비에는 공공요금·임차료·보험료 등도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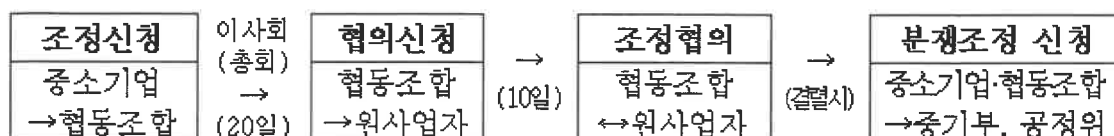
□ 조정협의 요건

- 개별기업 : 별도 요건없이 상시 조정신청 가능
-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참여요건
 - ① 해당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
 - ② 원사업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
 - * (하도급법) 상출집단 매출액 3,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(상생법) 상출집단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
 - ③ 계약 기간 이내에 신청한 경우
 - ④ 공급원가 변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(하도급법)

기간	계약체결 후 60일 경과 (전체 계약기간 60일 이내)	계약체결 후 60일 미경과
요건	·(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 10%↑) 원재료 가격 10% 이상 상승	·(원재료/노무비/기타경비 변동금액) 하도급 계약금액의 5% 이상 상승
	·(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%↑) 3년 평균 최저임금 7% 이상 상승 * 3년 평균 7% 미만시 평균인상률	
	·(원재료/노무비/기타경비 변동금액) 잔여 하도급대금의 3% 이상 상승	

* 수위탁거래의 경우 기간에 따른 구분없이 동일

□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



2

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개선 추진경과

□ 문제점

- 협동조합이 영세한 경우 조정협의를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
 -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및 협상력 부족 등의 문제가 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동일한 문제 지속 발생 및 해소 곤란
 - 인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협의 개시까지 단기간(20일) 내에 사실조사 및 이사회(총회) 개최 부담이 발생하여 조합원사들에게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활용을 적극 권유할 유인 부족

*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현황 ('20.2월 기준)

구 분	합계	연합회	전국조합	지방조합	사업조합
조합수	939	23	225	314	388
조합원 수	71,756	-	22,250	31,214	18,292

* 「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」 결과(중소기업중앙회, 2018)

- 평균 조합원사 : 91.6개 / 평균 직원수 : 3.1명
- 상근이사 : 있음(60.4%), 없음(39.6%) / 상근직원 : 있음(85.3%), 없음(14.7%)

-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해도 신원노출에 따른 부담, 보복우려 등 조정협의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 한계 존재

* 중소기업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(중소기업중앙회, '19.3월)

-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: 직접 협의(62.0%), 의향 없음(38.0%)
 - [협의의향 없는 중소기업 대상] 협동조합 통한 신청 의향 : 14.2%
- 조정의향 없는 이유 : 신원노출에 따른 거래단절 우려(48.5%), 결과 불확실(20.9%), 제조원가 공개부담(14.7%), 협동조합 미가입(8.6%) 등
-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: 원가변동시 조정협의 의무화(58.2%), 조정협의 서류 등 절차 표준화(15.8%), 신원노출 최소화(14.0%) 등

- 중소기업의 협상력 보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나,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

□ 제도개선 추진경과

- 상생협력부, 납품대금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
 - 중소기업(협동조합)의 협상력 부족 문제, 행정력 부담, 신원 노출에 대한 보복조치 등 해소 위해 「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부여」 방안 마련
- 정부(공정위, 중기부)와 제도개선 협의 및 정책건의
 - (공정위) 「하도급 대책 마련 TF」 참여('19.7~11월) 및 공정위원장 간담회시 정책건의('19.11.21) 등
 - (중기부) 제도홍보, 활용 모니터링 등 제도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정책건의

□ 개선방안 마련

- 당장·청 「대·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」 발표('19.12.16)
 - ▲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보완 방안을 위해 본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▲ 대·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 증진 ▲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·확산 ▲ 시장감시 강화 등 종합적인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 마련
-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관련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선	추진방식	목표
협의권자	개별기업, 협동조합	개별기업, 협동조합 + 중앙회	법 개정 *하도급법 (제16조의2) *상생협력법 (제22조의2)	'20.12
신청사유	공급원가 상승시	공급원가 상승 + 약정CR* 후 원가 미하락		
대상 원사업자	상출집단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↑) *상생법은 중기업까지 포함	상출집단 + 중견기업 전체	시행령 개정 *하도급법 시행령 (제9조의2)	'20.6
가능시기	계약 후 60일 이후	계약 즉시		

* 약정CR(Cost Reduction) :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기인하 계약

□ 향후계획

- 개선방안 실행 위한 법률(하도급법, 상생협력법) 개정 추진('20.하반기)
 - 정부(공정위, 중기부) 협력 통한 개정안 마련 및 발의(의원입법 추진)
 - 21대 국회 구성시 소관위 방문, 설명 통한 '20년 내 법 개정 추진
- * 하도급법 : 정무위(공정위), 상생협력법 : 산자중기위(중기부)